

위기의 한반도 2003년

평화와 전쟁, 희망과 절망의 기로에서

박명림

오늘의 한국은 첨예한 위기의 정점에서 있다. 누구도 오늘의 위기가 어떻게 해소될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이 중대 위기가 전쟁으로 치달을지, 아니면 지혜롭게 해소될지 아직 우리는 알 수 없다. 위기는 해소되지도 폭발하지도 않고 그 해결이 유예되고 있을 뿐이다. 다만 우리는 한 가지 점만은 분명히 알고 있다. 이 위기를 평화로 안착시키려는 혼신의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위기의 크기는 위기 폭발 이후의 피해 및 위기 극복 이후의 평화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곧 기회의 크기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것은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준 오랜 역설이기도 하다.

위기의 정점에서 우리를 가장 비통하게 하는 것은 50년 전의 참화에도 불구하고 오래 예견된 이 위기 앞에 우리가 바람직하면서도 실현 가능한 어떤 학문적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왔다는 점이다. 지식의 사회성, 곧 학문의 사회적 실천을 유념할 때 이 문제는 더욱 엄중하게 다가온다. IMF 외환 위기를 '예견하지 못했다'며 수년 전 경제학자들에게 가해졌던 비판은 사실은 '예견된 위기 앞에서조차' 무력한 정치학자들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었다. 이 말은 정치학도인 필자 자신의 부끄러움을 먼저 고백하기 위한 것이다.

2003년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평양에서는 이 위기를 넘기 위한 지혜를 모아보고자 제6차 남·북·해외학자 통일회의가 개최됐다. 회의는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해외학자들이 참여해 평양에서 열리는 평화·통일관련 학술회의라는 점에서, 또 핵·전쟁 위기가 정점으로 치닫는 시점에서 열린다는 점 때문에 예비회의 때부터 크게 긴장됐었다. 우리는 대결과 전쟁으로 가는 듯한 이 물줄기를 돌려놓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분단 58년만에 처음으로 평양에서 합동 평화·통일 학술회의가 열린다는 점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었다.

2003년 3월 26일 아침 평양

2003년 3월 26일 아침 7시 30분 평양 고려 호텔. 3월 21일 평양 도착 이래 하루도 빠짐없이 밤낮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타결하지 못한 문제를 놓고 남과 북의 「제6차 남·북·해외학자 통일회의」 실무 대표들이 긴장된 모습으로 다시 마주 앉았다. 회의 개최 예정 시간은 당일 오전 9시였으나 아직 회의 개최 자체를 타결하지 못한 것이었다. 1995년 이래 오랜 예비 및 본회의로 친숙해진 남북의 실무 대표들은 기로에서 있었다.

각각의 주장을 고수하며 회의를 결렬시킬 것인가, 타협을 통해 회의를 성사시킬 것인가? 며칠 동안 한숨도 못 자며 타결을 시도해왔던 필자는 다른 남측 대표들과 함께 긴장된 마음으로 회의실에 들어섰다. 결렬인가 타결인가를 판가름할 최종 회의 역시 지난 수일처럼 평행선이었다. 북의 입장은 더 완강해졌고, 회의 전망은 더욱 비관적이었다. 평양의 공개된 장소(인민문화궁전)에서 개최될 회의라는 점 때문에 북측의 입장은 흔들림이 없었다. 북측은 이것은 단순한 학술회의가 아니며, 인민문화궁전에는 이미 200여 명의 최고의 남북 문제 전문가들이 집합해 있을 뿐만 아니라 『로동신

문』, 조선중앙 TV, 조선중앙통신 등 주요 언론이 모두 취재를 하는데 어떻게, 회의 의제 및 발표내용과 관련한 남측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느냐며 물러서지 않았다. 입술이 타 들어갔다.

이미 합의해 신문·방송에까지 보도된 회의 개최 시간(09:00)을 넘길 때까지도 타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남측 대표들은 결단을 내려야 했다. 수개월간 고생하며 준비한 회의를, 아니 수년간 지속된 회의를 최초로 한반도 내에서 개최하면서, 또 모든 발표 토론자들이 남북한을 비롯해 독일, 미국에서까지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회의 결렬을 공표해야 하는가? 밖에는 이미 회의장으로 갈 버스를 타기 위해 남과 북의 학자들이 모여 있었고, (사후에 안 일이지만) 그 중에 일부는 우리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서울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하고 있었다. 남북 관계사의 표면과 이면의 궤적을 꿰고 있는 우리 남측 대표는 바로 그런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에서, 또 민족 앞에 놓여 있는 위기를 넘어보고자 지적 실천의 한 방법으로 이곳에 모여 있는 우리 자신이 대결을 반복할 수 없음은 물론 결렬을 통해 남북관계를 더 심각한 긴장으로 몰아 넣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벼랑끝전술 brinkmanship과 역벼랑끝전술 counter-brinkmanship의 충돌로 마지막 순간의 긴장은 칼끝 같았다. 북핵 위기에 대한 인식의 거리는 현실 정책의 거리보다 훨씬 더 길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남과 북의 주장을 절묘하게 안고 넘는 최종 타협안을 제시했고 북은 극적으로 수용했다. 그 순간 필자는 북핵 문제, 한반도 평화, 통일 문제는 긴 우여곡절을 겪겠지만, 마지막 순간의 해결은 허탈하리만치 극적이고 간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했다. 회의 개최 시간을 30분이나 넘겨서야 회의 개최 및 발표 내용이 최종 타결됐다. 결국 회의는 예정보다 두 시간을 넘겨 시작됐다. 물론 발표 논문은 인쇄할 시간조차 없었다. 인민문화궁전에서 회의는 일단 시작하고 원고는 추후 수송하기로 했다. 방송과 신문에 보도된 대로 필자는 회의 중간에도 표현 하나하나를 놓고 북측 대표와 검토 작업을 계속했다.

남측 대표단은 순간적인 판단력과 순발력으로 마지막 국면을 타개해 냈으나 현장의 순간 순간의 판단은 긴 역사 의식과 거시 전략의 압축일 뿐이었다. 북핵 위기의 심장부에서 한반도 평화·통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개 학술회의가 최종 타결된 것이었다. 그만큼 우리에게 오늘의 위기는 절박했고, 어떻게 해서든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의사를 전달해 위기 해소에 기여해야 한다는 소명감이 절실했다. 그 때의 타결 과정과 내용을 전부 공개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우리는 이 날 아침의 장면 장면들이 남북관계의 역사에서, 당국관계에도 참고할 만한 한 장막으로 기록될 수 있다고 자평한다.

학술회의를 포함한 다양한 수준의 북한과의 회의를 준비해본 사람들은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내용을 대폭 양보하거나, 내용을 관철시키려면 회의 개최를 포기해야 하는 진퇴양난의 경험을 수없이 해왔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 통일포럼은 1995년 이후 예비회의 및 본회의를 통해 회의도 개최하고 우리의 내용도 관철한다는 이중 목표를 포기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그동안 이런 이중 목표는 매년 결렬 위기에 직면했지만, 늘 타협을 통해 달성하는데 성공해왔다. 물론 우리는 북측의 절제된 견해를 충분히 듣는 데에도 충실하고자 했고 이 또한 성공해 왔었다.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에 동조하거나, 아니면 경제적 이득의 제공 없이는 학술회의를 포함한 남북 교류의 성사가 쉽지 않다고 생각해온 사람들에게 한국 통일포럼의 지속적인 학술회의는 하나의 예외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통일전선전술에의 추종이나 경제적 이득의 제공, 둘 중 어느 것 하나도 없이, 또 한 번도 우리의 원칙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회의를 성사시켜왔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우리 사회가 그동안 당연시해왔던 대북 접촉시의 두 가지의 전통적인 문제 의식, 즉 '낭만적인 민족주의 동족 의식' 과 '대북 협상 전략전술' 이라는 문제 인식을 근본적으로 해체, 지양했기 때문이었다. 오늘의 남북 문제는 민족주의의 열정만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세계-현실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동시에 공산주의자들과의 협상 전략전술이

라는 협애한 문제 의식을 훨씬 넘어 존재한다. 이 둘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1) 전문 지식과 사실 인지, 2) 비전과 전망의 문제, 그리고 3) 협상 지혜와 예의, 세 가지에 있었다는 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이 문제에 대해 언젠가 기회가 있을 때 상론하려 한다.

간단하게 말하면, 먼저 필자는 인류와 민족 공동의 발전에 대한 보편적 전망과 시야, 비전, 예컨대 자유, 민주주의, 평등, 평화, 인권, 관용, 정의 등을 가장 중시했다. 확고한 비전의 문제 의식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설정 없이 회의는 일회성 행사로 끝나거나, 아니면 자칫 비밀 거래를 통한 업적주의나 한견주의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북한 및 남북관계에 끼치는 장기적인 긍정적 효과 또한 거의 없을 것이었다. 필자는 이점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무겁게 인식했다. 대화는 무엇보다 비전의 교환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필자는 남한과 북한, 그리고 남북관계의 역사와 현실에 대해 심도 깊은 학습과 준비를 통해 진실과 사실의 파악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했다. 대화와 협상의 현장에서 사실 장악이 갖는 중요성은 강조할 필요도 없다. 대화는 진실(이라고 생각되는 사실)의 교환이기 때문이다. 남북 문제에 관한 한 최고의 경력과 전문성을 갖는 북한 대표들(북한의 경우 민간 대표와 당국 대표의 구별은 없다. 우리 회의의 핵심 대표들은 전부 남북의 여러 당국회담의 대표들이다)과의 협상 타결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사실은 전술에 앞서며, 필자는 방북 이후 북한의 몇몇 중요 지점을 방문하면서 진실이 갖는, 학문적 힘이 아닌 현실적 힘을 자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북한에서 사실은 현실에 따라 항상 재정렬·재서술될 만큼, 과거가 아닌 그 대로 현실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지혜와 전략의 문제였다. 물론 거기에는 북측 대표의 입장과 정책에 대한 고려와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협상 타결에서 일방주의만큼 위험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한 독일 송두울 교수의 접근과 해석은,

단순한 가교 역할을 넘어 '타자는 자아의 인질' 이라는 그의 철학에서 보여 지듯 이제 거의 장인적 경지에 다다른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었다. 백영철 한국 통일포럼 회장이 명명한 이른바 '지뢰 제거 작업,' '토론의 예절' 의 2대 요소는 상호 이해와 전략, 내면과 외면을 드러내고 비판하며 동시에 또 끌어안을 수 있는 중용 지점이었다.

결국 우리는 평양 학술회의를 기획하면서 처음 구상했던 대로 평양의 심부에서 현재의 모든 핵심 문제, 즉 북핵·평화 문제를 포함해 6·15 공동선언의 의미와 보완점, 경제 교류협력의 방향과 과제, 북·미 평화협정이 아니라 남북 평화협정의 당위와 필요성·절차에 대해, 절제된 언어였으나 사실은 전부를 공개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간을 만드는데 성공했다. 그것은 실로 가슴 떨리는 출발이었다. 다만 의제를 올리는 대신, 구체적 세부 내용은 평양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모든 내용을 언론과 대중에게 공개된 학술회의에서 말할 수는 없었다. 그것들은 여러 형태의 비공개 회의와 만남에서 다양한 강도와 방식으로 전달됐다. 문제는 공개여부가 아니라 북한의 실제 정책 결정의 전환에 영향을 주어 오늘의 위기를 넘는 데에 조금이나마 기여하는 데에 있었기 때문이다.

핵·군사주의, 그리고 오늘의 북한

회의 준비와 접촉 과정, 정리 회의를 통해 나타난 북한의 사회 변화, 정책, 대남 인식은 학문적으로 현실적으로 결코 작지 않은 의미를 지니는 수준이었다. 먼저 가장 중요한 핵 문제에 대한 북의 입장은, 강경한 대결 의지 속에서도 대화를 통한 해결에 대한 강력한 희망을 피력했다는 점이다. 특별히 우리가 현장에 체류할 때 진행된 이라크전쟁을 보면서, 북측관료와 학자들은 무력이 없을 때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상황을 언급하며 군대의 절대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일방, 그러면서도 평화적 해결에 대한 절실한 희망을 피력하곤 했다. 대화를 구걸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의지의 이면에 내장된

대화를 위한 그들의 희망은, 최근의 어느 때 보다도 가장 넓은 시점처럼 보였다.

물론 북측 인사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핵을 개발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는 예의 공식적인 입장을 반복해 강조했다. 그러나 스스로 사활적으로 인식하는 군사적 및 경제적 이유 때문에, 그것이 어떤 수준이든 북의 핵 의지가 작지 않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었다. 실제로 현안이 되고 있는 핵 문제의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해결을 요구했을 때 오랜 만남을 통한 신뢰관계에도 불구하고 북의 고위 관료와 학자들의 일관된 입장은, 협상력 제고를 위한 것이었던 전술적 의도에서였던, '전략적 모호성 strategic ambiguity' 을 견지하려는 의도가 분명했다. 표면적 강경 부인과 내면적 핵화 의지의 충돌을 읽어내기란 그리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

이 문제와 관련해 예비회의(1월 28-31일, 베이징) 때부터 북측은 공개 회의에서 자신들의 핵 문제를 다루지 말아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결정적인 기회를 그냥 흘려 보낼 수는 없었다. 우리가 핵 문제가 어떤 방향을 잡기 이전에 평양에서 다시 이런 논의를 가질 시간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필자는 실제로 북한이 핵을 가지면 안 되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반복 전달했다. 먼저 북의 강도 높은 통일 구호 및 정책과는 달리 핵 보유는 민족을 영구분단 상태로 몰아넣는다는 점이다. 핵을 가진 일방과 핵을 갖지 않은 일방의 남북관계는 비대칭적이며 불균형적이며 불평등할 것이 분명하다. 핵은 민족의 통일에 반한다. 둘째는 민족 전체를 상시 핵전쟁 위협 상태에 놓이게 한다는 점이다. 남과 북은 영원히 핵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다. 미국의 전쟁 위협 이전에 핵화核化가 전쟁 요인이 될 수 있다. 핵은 민족의 평화에 반한다.

셋째 북의 핵 보유는 미국의 MD 정책 및 일본의 핵무장을 정당화시켜준다. 미국은 이미 북의 핵화 의지로 인해 MD에 대한 세계의 반대를 돌파하며 군사 패권 전략 구상을 실현해나가고 있다. 북핵은 또한 한반도와 동아

시아를 핵 대결의 장으로 변전시켜 남북 문제·평화 및 통일 문제에 대한 우리, 특히 핵이 없는 남한의 주도권을 현저히 약화시킨다. 반미·반일을 절대적으로 강조하는 북의 핵 보유는 궁극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국가 이익 및 군사 전략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핵은 민족의 이익에 반한다. 넷째 북의 핵 보유는 북의 고립과 단절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단기적으로 북은 핵을 통해 체제 유지를 위한 군사적인 전략적 우위 지점을 확보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핵을 보유한 북에게 국제 사회와 남한이 인도적 지원과 식량 지원을 포함해 경제 원조를 지속하기는 어렵다. 북의 고립과 절연은 결정적으로 심화될 것이다. 핵은 북의 장기적 이익에 반한다.

다섯째 북이 핵을 보유하면 남한의 경제는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된다. 이미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은 북이 핵을 보유하게 됐을 때 남한 경제의 신용을 떨어뜨릴 것을 강력히 시사한 바 있었다. 북이 오래 강조했듯 남과 북 어느 일방의 경제 발전은 민족통일의 물질적 담보가 된다. 남의 경제 침체는 그런 점에서 곧 북의 경제에 대한 직접적 타격이 된다. 자기를 위한 선택이다 시 자기를 침식하는 효과를 초래하고 말 것이라는 점이다. 핵은 남한의, 그 밖으로써 북한의 경제에 대한 심대한 타격이 된다. 이상의 이유에서 북핵의 저지는 미국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남한의 프로젝트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금번 회의를 통해 알려지지 않았던 몇 가지 중요한 사실도 알 수 있었다. 하나는 1990년대 이후의 체제 위기에 대한 북한 내부의 대응 문제에 대해서이다. 북한의 고위 관료와 학자들에 따르면 사회주의 붕괴 이후 북에서는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 것인가에 대한 상당한 내부 논쟁과 논란이 있었다. 요약하자면 경제 우선이나 군대 우선이나 하는 문제였다. 그리고는 최종적인 결론을 내렸다. 군대를 절대적으로 강화하지 않고는 위기를 넘길 수 없다는 것이다. 당-국가 party state인 사회주의 체제에서 '당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없다가도 다시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군대가 망하면 국가도 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군대에 우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는 언

명은 충격적이기까지 했다. 그들은 '우리는 분명히 군사 우선, 군대가 영도하는 사회주의를 건설하려 한다'고 언명했다. 현재 군사주의는 북한에서는 특정 정책의 수준을 넘어 사실상 체제 이데올로기로 상승하고 있었다.

오늘날 그들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가 자원과 역량을 군사력 건설에 집중하지 않았다면 인민 생활과 경제는 좀 나아졌겠지만 체제는 끝났을 것'이라고 분명히 진단하고 있었다. '반대로 경제가 아니라 군대에 집중했기 때문에 경제와 인민 생활은 어려웠지만 체제를 수호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이 점에 관한 한 인민들은 전폭적 동의 아래 허리띠를 졸라매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 정책을 견결히 옹호·고수·지지했다고 강조했다. 일단 체제를 지켜낸 이제부터 체제를 회복시키면 된다는 희망의 조심스런 복원이었다. 18세기에서 20세기까지의 사회주의는 노동계급이 영도하는 사회주의였지만, 따라서 노동계급의 당이 영도하는 사회주의였지만, 이제부터는 제국주의에 포위된 상태에서 북한에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대, 총창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군대가 영도하는 사회주의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21세기의 사회주의는 노동계급 중심의 사회주의가 아니라 군대 중심의 사회주의라고 분명하게 강조했다. 맑스주의-레닌주의를 수정하고 있다는 이론적 입장도 분명하게 천명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나 군사주의는 이제 맑스주의-레닌주의, 주체사상에 이어 점차 북한 체제를 장악하고 있는 체제 이념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둘째는 1994년 제네바 기본 합의 이행에 대한 북한 내부의 논의였다. 상당한 양보를 받아낸 미국과의 합의 체결 이후 1995년부터 북한 내부에서는 과연 이 합의를 미국이 지킬 것인가, 이 합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둘러싸고 상하를 막론하고 상당히 심도 깊은 내부 논의와 논란이 있었다. 종종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나의 견해는 미국이 지킬 것이라는, 그리하여 제네바 합의 체제가 유지될 것이라는 입장이었고, 반대의 견해는 미국은

결국 지키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해 제네바 합의는 결렬될 것이고 북한 자신은 더욱 심한 에너지 문제에 봉착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온건과 강경 입장이 나뉘어 있었다는 것이다. 온건파는 다수였고 강경파는 소수였다. 후자의 주장을 상세히 들으며 이들이 예측한 도정이 오늘의 실제 사태와 거의 일치한다는 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더욱이 사태는 이들의 주장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향후 대응을 예견케 한다.

이런 분기分岐는 결국 그동안의 북한의 대응이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상당한 전략적 내부 근거와 논의를 갖는 것이라는 점과, 당시 당과 정부에서 국제 분야, 대미 문제, 대남 문제를 담당했던 사람들의 이후 행로와도 직결되어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일정 부분 내부 정치 지형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고 그들은 보고 있었다. 오늘의 사태를 초래한 근원 문제에 대해 북한 내부에서 이런 두 견해와 두 전망이 존재했었다는 점은, 그리고 오늘의 강경 대응을 선택한 도정은 오늘의 북한의 입장, 태도, 전략, 정책 등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물론 제네바 합의 체제 기간 동안에 군사주의가 전면에 등장하고 강성대국론이 국가 공식 노선으로 된 것을 볼 때 위의 분기와 북의 대응은 향후 남북관계와 남한의 대북 정책, 제네바 합의 체제 이후의 경로에도 커다란 참고가 될 것이다.

셋째는 미국에 대한 적의와 적대 의식, 결연한 대결 의지의 충만과 만연이었다. 평양의 순안 비행장에 도착한 이후 고려 호텔에 이르기까지 평양에는 미국, 미제를 비판하고 타도하자는 슬로건을 수도 없이 읽을 수 있었다.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 응위하자'는 구호 역시 어디서나 찾을 수 있었다. 그 대상은 물론 미국(으로부터의 침략)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필자가 만난 관료와 학자들의 미국에 대한 인식은, 90년대 중반 미제를 미국으로 바꿔 부를 때와 정반대로 바뀌어 있었다. 많은 공식적, 비공식적인 언명을 넘어 다음의 사례들은 오늘날 북한 당국과 주민들의 대미 인식을 이해하는 상징 이기에 충분했다. 하나는 '복수의 맘 불타요'라는 청소년 가요였고, 다른

하나는 인민군 장교와의 짧은 대화였다. 전자는 지난 해 남한에서의 두 여 중생 사건에 대한 북한 학생들의 복수의 적개심을 나타낸 것으로서 전국적으로 학생들에게 불리고 있었다. 그 노래 가사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평양 교외에서 잠시 만난 한 인민군 중견 장교와의 짧은 대화는, 평화적 해결과 대화의 필요성에 대한 절박감의 이면으로, 북미·남북관계의 현실에 대해 필자에게 정수리에 찬물을 끼얹는 어떤 현실감과 서늘함을 순식간에 복원시켜줬다. 강한 어조로 끊어 말하는 단답형의 신념어 信念語에다가, 쉿 소리 나는 강한 평안도 사투리가 담긴 그의 표정과 언표를 통해 상시 포위의식 속에 놓여 있는 오늘의 북한이 세계 및 미국과 대면하며 직면하고 있는 현실, 그것에 대한 인식과 의지, 최종적인 사회적 국가적 힘의 소재 등 여러 가지를 재빨리 파악할 수 있게 해줬다. 자아와 타자, 민족과 제국, 자주와 종속, 삶과 죽음을 선명하게 양분하는 가운데 표정과 언어, 몸짓으로 전달되는 그의 강단과 결연한 의지는 단단한 쇠못치를 보는 느낌을 갖게 해줬다.

전력 사정과 식량 사정에 대한 가감 없는 솔직한 토로 역시 이례적이었다. 전력과 에너지 사정의 경우 평양이 상당히 호전된 것으로 보여 그 이유를 묻자 예상치 못한 솔직한 대답이 나왔다. 미국의 압살 정책으로 경수로 건설이 중단되고 중유 공급마저 끊겨 전력 사정이 너무 열악해져 각 지방 별로, 군별로 자체 해결을 하도록 하면서, 즉 중앙 통제와 배급의 원칙을 지방 자체 조달의 원칙으로 전환하면서 평양의 경우는 지방에 공급하던 전력을 자체 사용으로 전환할 수 있어서 오히려 나아졌다는 설명이었다. 반면 지방의 경우는 사정이 너무나 힘들다고 토로했다. 과거 같으면 숨길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제는 그만큼 솔직해지고 대담해졌음을 알 수 있다.

식량 사정을 묻는 말에도 과거에는 기아 사망자, 탈북자 문제에 대해 부인과 반박으로 일관했으나 금번에는 고난의 행군의 기간 동안 상당수의 주

민들, 특히 노인과 어린이들이 사망했음을 인정하고 있었다. 김일성 대학을 비롯한 주요 기관의 교수나 학자들인 안내원들도 이런 인식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자신들의 결정적인 치부를 인정하는 이것은 놀라운 변화였다. 그것은 다른 한편 위기의 터널을 지났다라는 최소한의 안도감과 자신감 소생의 반영인지도 모른다. 물론 그들은 국가 전체로는 지난 해 7·1 경제 관리 개선 조치 이후 경제 사정이 상당히 호전됐음을 말하면서 크게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오늘의 북한은 전쟁 위기 속에서도 이제 전쟁만 없다면 최악의 국면은 넘었다는 의식이 가득했다. 그러나 집단 아사의 원인을 자연 재해와 미국의 경제 봉쇄로만 돌리는 인식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필자는 북한의 절망적인 식량 사정 때문에라도 오늘의 북핵 위기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며, 북의 대량살상무기 포기과 공고한 평화 체제 구축을 통해 대폭적인 대북 식량 지원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 물론 이런 말들을 북측 대표들에게 수없이 강조해 표명했다. 이 문제가 남한에서는 재고식량이 남아 돌고, 또한 호텔과 식당의 음식 쓰레기가 넘쳐나는 반면, 다만 휴전선을 하나 사이에 뒀을 뿐인 다른 한편에서는 집단 기아와 아사가 속출하는 21세기 한반도의 극적인 반문명성, 반도덕성을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현실은 도덕을 넘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오늘 집단 아사 위기를 겪고 있는 아동들이, 특히 여자 어린이들이 가임可妊 연령이 됐을 때에 나타날 가공할 우생학적 생물학적 비정상성과 파괴까지 생각한다면 오늘의 위기는 기실 수 세대를 두고 나타날 전율할 대참사의 시작에 불과한지 모른다.

우리가 경제적 풍요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념적 이유로 오늘의 북한 기아를 풀지 못해 다음 세대에게 생물학적 집단 변형을 유증, 강요한다는 것은 하나의 집단 범죄일지 모른다. 소년공전에서 만난 공연단 어린이들의 짝 놀랄 연기력과 묘기가 내게는 결코 박수의 대상으로만 다가오지 않았던 것은, 참을 수 없는 슬픔과 안타까움과 함께 여러 정치적·경제적·세대적

문제가 증척되어 다가왔기 때문이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아마르티야 센 Amartya Sen이 말하듯 기아는 결코 자연 재해의 산물이 아니며 철저하게 인재이기 때문이다. 근대 이후 기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전부 분배의 문제와 직결된, 또는 체제 속성과 직결된 독재 국가의 고유한 현상인 것이다.

당시 회의는 이라크전쟁이 한창일 때 열려 이라크전쟁에 대한 그들의 인식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라크전쟁에 대한 북한의 관심과 판단은 극도로 민감했으며, 심각한 위기 의식 또한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북한은 이라크전쟁을 보면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그들은 미국과 대결했을 때 결코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단호한 결전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내면적으로는 오늘날 누가 과연 단독으로 유일 제국 미국의 무력을 넘어설 수 있겠는가 되물고 있었다.

북한은 특히 남한의 파병 결정에 대해서는, 그것이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의 한 바로미터가 되지 않겠냐며, 또 향후 노무현-부시 정부의 한·미 관계를 청초 짓는 역할을 하지 않겠냐며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평양에서 우리를 가장 곤혹스럽게 했던 이슈의 하나는 이 문제였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남한 정부의 고뇌를 충분히 설명해줬으나 그것이 제대로 이해, 설득됐는지에 대해서는 자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정부와 사회의 입장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데는 최선을 다했다. 모든 행위에서 바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이다. 개인의 신념과 국가의 선택이 모든 사안에서 철두철미 일치할 때만이 우리가 우리 행동의 정당한 도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부분에 대해 애국을 독점하지 말고, 공존과 타협을 통해 애국의 방법에 대해 공유하자고 말할 때의 참뜻은 이런 철학적 사유로부터 발원하는 것이다. 이 말의 참뜻이 남과 북에서 제대로 읽힐 때 우리는 평화의 미래를 구축할 수 있을지 모른다.

아마도 가장 큰 성과의 하나는 북한이 남한이 말하는 다자주의多者主義를 수용하고, 불가침조약 체결 주장을 거둬들일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일 것이다. 남한의 대표들은 미국과 남한의 다자주의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남한이 제시하는 다자주의를 수용할 것을 반복해 강조했다. 북한이 핵 문제에 대해 북·미 양자 회담을 고집하는 이유는 분명했다. 1953년 휴전협정의 주체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한반도에서의 군사 문제는 북·미 간의 문제라는 것이었다. 제네바 기본 합의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는 북핵 문제는 더 말할 필요도 없었다. 거기에는 한·미 관계, 특히 한·미 군사관계의 구조와 현실에 대한 북한의 특별한 인식 — 자주성이 없는 종속관계라는 — 이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그들은 1994년 체제를 전환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수정하려는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의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왜 다자주의를 수용해야 하는가를 설득력 있게 강조했다. 그리고 미국과 남한의 다자주의의 차이 점도 세밀하게 분별해 설명해 줬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남한, 북한의 중층 구조와 길항 구조도 설명해주며 우리는 다자주의가 반드시 대북 압살 정책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고, 거기에 우리 모두와 북한을 위한 해법exit이 있을 수도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다자주의 접근의 형식과 방법, 순서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도 설명해줬다. 필자는 북핵 문제는 북한과 미국 사이의 윈-윈 게임이 아니라 남·북·미가 모두 소기의 목적을 이루는 윈-윈-윈 게임이 되어야 함을 수도 없이 강조했다. 북한은 처음에는 다자주의가 '제네바 기본 합의의 파기 책임을 회피하고 북한을 압살하려는 미제의 전술'이라며 완강하게 거부했다. 평양을 떠나며 우리는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인상을 강력하게 받았다. 실제로 북의 관료와 학자들은 '당신들이 말하는 다자주의라면 우리가 마다할 이유가 없다' 고까지 분명하게 말했다.

'북·미 평화협정' 보다는 '남북 평화협정'이 옳고 타당하며, 가능하고 바람직하다는 점도 반복해서 설명해 줬다. 사실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 주장

은 북으로서는 문제 해결의 필수 전제조건이라든가 최종적 요구사항이 아니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북은 처음에는 요지부동이었으나 나중에는 북·미 불가침조약이 체결된다고 해서 실제로 완벽한 체제 보장이 되겠느냐며 그것은 사실 체제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말했다. 우리가 불가침조약을 체결하고도 전쟁은 있을 수 있고, 불가침조약이 부재해도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하자 북측 역시 이런 판단에는 전적으로 동의했다. 필자는 차라리 국교 정상화, 체제 보장, 경제 봉쇄 해제를 포괄적으로 묶어내는 북·미 관계의 전면적 정상화가 쉬운 길이며 그 지름길은 핵-미사일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의 전면 포기, 그리고 남한의 적극적 역할을 인정한 토대 위에서 남북 평화협정과 대북 지원을 결합해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낫다고 제안했다. 그 출발점은 실패한 94년 체제의 복원, 즉 북·미 관계가 아니라 남북관계라고 반복해서 설명해 줬다.

평양을 떠나면서 우리 대표단은 북의 관료와 학자들이 우리에게 보인 반응에 비춰 북이 최소한 북·미 양자주의와 불가침조약 체결 주장은 상당 정도 양보할 것이라는 판단을 갖게 됐다. 북측의 일부 대표는 남한이 미국으로부터의 군사적 담보를 받아낼 수 있다면 남북 평화협정이라고 해서 체결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까지 말했다. 당시 평양에서의 북측의 이런 정책 표명이 여러 이유로 당시 시점에서 보도되지 못한 것은 두고두고 아쉬운 느낌이다. 예민한 문제에 대한 예민한 반응을 통한 공표는 종종 역사의 물줄기를 돌려놓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소득은 우리 정부와 시민사회의 판단과 역할 여부에 따라서는 남한의 영역이 예상외로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됐다는 점이다. 문제는 우리의 대응 능력일 것이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2003년을 한반도의 평화 원년으로
 북핵 문제는 곧 북·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다. 모든 사회현상을 해결하는 출발점은 그 문제에 대한 나의 인식 관점을 확립하는 데서부터 출발

발한다. 나는 그 문제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우리는 그 문제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를 설정하는 것이 문제 해법을 찾는 첫 출발인 것이다. 북핵 문제는 곧 한반도 핵 문제이며, 따라서 한반도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북·미 문제를 넘어 무엇보다도 남북 문제이며 한·미 문제인 것이다. 문제의 제일 차원은 남북 수준이며, 제이 차원은 북·미·한·미 수준인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주체, 정체성, 그리고 우리의 해법과 직결되어 있다. 우리는 그 문제와 관련해 누구이며, 우리는 어떤 대안을 갖고 어떻게 풀어갈려고 하느냐는 것이다. 결과를 고려할 때 우리는 이 문제의 제3자도, 방관자도 아닌 주체인 것이다. 문제는 북한과 미국의 양극화와 대립이 아니라 우리 문제인 북핵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대안을 마련하느냐는 것이다.

우리 정부와 시민사회는 우리 자신의 확고한 입장과 안을 갖고 이 문제의 해결에 전력 질주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통령의 문제 인식은 가장 중요하다.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은 결정적 순간의 결정적 역할이 필요한 엄숙하기까지 한 역사적 순간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 정책 우선 순위 priority setting에서 지금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사안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은 당분간 대폭 줄여도 된다. 의지, 시간, 노력, 열정, 지혜를 이 문제를 푸는 데에 최고로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은 이라크전쟁의 종식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절묘한 시점이다. 남과 북은 지금 세계와 한민족을 안심시킬 평화의 안을 함께 도출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

한반도가 핵화됐을 때, 그것을 핵화를 추구한 북한의 리더십만이 비판받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다. 주체적 의식을 갖고 우리 문제로 바짝 달라붙어도 해결이 결코 쉽지 않은 사활적 문제를, 제3자적인 중재 의식을 갖고는 조금도 풀 수 없다. 대통령은 더 이상 중재라는 표현을 써서는 안되며, 우리는 결코 중재자가 될 수도 없다. 이론적으로 볼 때 국제 문제에서 갈등의 중재 역할에는 두 가지의 요소가 필요하다. 하나는 직접적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서의 위치이고, 다른 하나는 갈등 당사자들보다 월등한 힘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의 일차 당사자이며, 또한 미국과 북한에 비해 월등한 국력을 소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반복 사용한 중재 역할에 대한 의지 표명은 중대한 인식 오류의 표현일 뿐인 것이다. 인식 오류는 정책 대안의 오류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 말을 바꾸면, 대통령의 중재자-제3자로서의 인식은 결과적으로 초기의 강한 '반전-반미' 접근 방식과 반미 이후의 강한 '반핵-반북' 접근 사이의 급격한 전이를 초래하는 근본 원인이었던 것이다.

한반도 핵화를 방지한다면 앞서 말한 모든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고 방치한 역사적 책임을 남한의 리더십도 결코 면할 수 없다. 한반도의 영구분단, 상시 핵전쟁 위기, 경제 침체, 한반도 문제에서의 남한의 역할 상실.... 지금 노무현 대통령은 한반도에 평화를 안착시킨 지도자로 기록되느냐 아니면 민족이 핵화-핵전쟁 위협으로 가는 길을 방치한 지도자로 남느냐의 운명적인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우리는 위기의 정점에서 우리의 비전, 고뇌, 지혜, 대전략, 대결단을 묶어 역으로 2003년 전쟁의 위기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전쟁 위기, 종전 50주년의 올해를 역으로 한반도 평화의 원년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한 사회가 파국적 위기를 넘는 지혜는 결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산물일 수 없다. 그것은 사회적 지혜나 민족적 지혜의 총량에 의해 결정된다. 오늘 위기의 재연은 결국 우리가 평화를 위한 집합적 지혜의 창출에 실패한 우리 자신의 몽매, 무지, 비이성의 산물이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게다가 평화는 엘리트와 국가만의 노력의 산물도 아니다. 한 가지 우리가 뚜렷하게 인식해야 할 점은 평화 문제를 둘러싼 국가와 시민사회의 본질에 관한 것이다. 평화는 평화를 위한 우리의 주체적이고 의식적인 움직임, 즉 평화

운동 없이는 불가능하다. 국가가 평화 창조의 주체일 수는 없다. 특정 영토 내의 폭력의 독점을 기본 요소로 하는 국가는 안보, 즉 평화 유지의 주체일 수는 있지만 평화 창조의 주체는 아니다. 국가가 평화 유지의 주체라면, 시민사회는 평화 건설의 주체가 된다. 평화 건설이 평화운동 없이 가능하다는 희망은 성립이 불가능하다. 그것은 시민, 시민사회의 영역이며 따라서 '평화 건설=평화 만들기'는 시민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평화는 군사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 북한과 미국은 자신의 군사주의는 중단하지 않은 채 상대방의 군사주의가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상대의 군사주의는 반평화적, 전쟁 지향적이고 자신의 군사주의는 평화 수호용이라는 지독한 역설인 것이다. 핵개발을 포함, MD를 비롯한 미국의 군사주의에 잘 부응하고 있는 북한은 응당 먼저 핵화 프로젝트를 중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북한의 선제적 핵 포기는 미국의 MD 정책과 대북 전쟁 의도를 결정적으로 약화, 무력화시킬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군사적 핵 제거 위협 이전에 북한의 핵화 프로젝트가 먼저 시작됐음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북핵 프로젝트는 민족을 전쟁의 참화에 몰아넣을 지도 모를 위험한 도박이 아닐 수 없다. 그 점에서 1980년대까지 지속된 한국 시민사회의 반핵운동이 북핵 위기 앞에서 중단된 것은, 민족주의 이외에는 설명 불가능한 탈냉전기의 숨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1999년 유네스코의 천명 이래 이른바 평화의 문화culture of peace는 오늘날 평화운동, 전략, 이론, 철학, 체제의 핵심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평양에 전쟁의 문화culture of war와 군사의 문화culture of military는 넘쳐흘렀지만 평화의 문화는 조금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곳에서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는 평화에 의해 담보되는 인간안보human security와 전혀 함께 가고 있지 않으며 그것은 체제안보regime security를 의미할 뿐이었다. 그러나 반세기에 걸친 그들의 고립과 봉쇄를 고려할 때, 전쟁을 통하지 않으면서 밖으로부터 이를 풀어주는 것 역시 평양에 평화의 문화를 소생케 하는 적절한 경로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이 말하는, 전쟁을 통해 전쟁 위기를 해소한다는 역설은 결코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쟁 옵션의 선택은 전쟁이지 전쟁 위기 해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과 북한은 두 군사주의, 두 예외주의 exceptionalism의 충돌을 중단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평화의 문화가 인간안보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북한에서 집단적 아사, 탈출, 강제수용을 포함해 인간안보가 철저히 파괴되고 있음은, 인권에 대한 보편주의 universalism와 특수주의 particularism의 충돌과 긴장문제를 넘어, 우리가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핵심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제국의 국가 이익 추구가 인권 및 민주주의에 대한 보편주의의 탈을 쓰고 추구되는 것을 수용해서도 안되겠지만, 반대로 특수주의의 우산에 숨음으로써 인권과 민주주의, 인간안보에 대한 보편 기준을 거부하려 해서도 안될 것이다. 우리는 오늘의 김정일 체제의 특수주의 담론에 대해 침묵하는 동안 우리가 과거에 박정희 체제의 특수주의 담론, 즉 국가안보를 이유로 인간안보를 제한하는 논리에 저항했었던 우리 자신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해답은 보편주의와 특수주의의 이상적 결합이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인간안보의 최소 요건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평화의 조건'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한다. 나는 그것을 이중 민주화 프로젝트라고 부르려고 한다. 먼저 국내적 조건은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평화의 최고의 비용은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시민사회가 민주주의를 달성하고 통제하는 체제에서 시민사회가 자신들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평화를 파괴할 수는 없다. 민주화 이후 남한에서 보여지는 대북 온건 정책 및 지원 노력, 전쟁에 대한 시민사회의 견제 역할은 민주주의와 평화 지향의 상관관계를 잘 보여준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평화를 위한 국내적 민주화 프로젝트는 곧 북한의 민주화를 의미한다. 전인민을 기아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민족을 핵화核化의 위협으로 몰아가며 (대내

적) 생명과 (대외적) 평화를 외면하는 북한의 군사제일주의는 극단적인 비민주성의 산물로서 그 반대가 곧 생명과 평화를 위한 선택이 된다. 따라서 북한은 반생명·반평화의 이데올로기와 평화 정책·반전 논리를 동일시하는 오류에서 빨리 벗어나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평화의 국제적 조건은 국가 간 관계의 민주화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전자 못지 않게 중요하다. 냉전이 해체된 지 10년 이상이 흘렀으나 한반도에서 국가 간 관계는 전혀 민주화되지 않았고, 이 점은 오늘날 한반도 위기의 한 요인을 이룬다. 즉 한·미 관계와 북·미 관계는 탈냉전 시대에 거의 변화하지 않고 있다. 요컨대 북·미 '적대' 관계와 한·미 '위계' 구조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민주화되어야 한다. 과거 냉전 시대에는 남북 '적대'와 한·미 '동맹'이라는 두 관계만 있었을 뿐 북·미 관계는 존재조차 하지 않았다. 남북 '적대'와 한·미 '동맹'이 자동적으로 북·미 '적대'로 연결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탈냉전 시대에는 남북 '적대'가 부분적인 남북 '화해'로 변하면서 한·미 '동맹'이 한·미 '균열'로 변전됐다. 남북 '적대'는 남북 '화해'로, 한·미 '동맹'은 한·미 '균열'로 변화하고 있지만, 북·미 '적대'는 냉전 시대와 동일하게 요지부동이다. 이 세 가지 관계를 동시에 바꾸지 않고서는 한반도 평화는 불가능하다.

북한이 말하는 민족 공조는 경제에서의 민족 공조일 뿐이다. 그러나 정작 민족의 공생을 추구해야 할 군사·평화 문제에서 그들은 오직 북·미 관계를 통해서만 문제를 풀어하려고 한다. 남북·한미·북미, 셋 중 가장 적대적인 북·미 양자 관계를 먼저 해결하려고 해서 이 문제가 결코 풀리지 않는다. 1994년 제네바 기본 합의 체제의 붕괴는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북·미 관계조차 북한은 크게 실기를 한 적이 있다. 분단 이후 지금까지 오직 김대중-클린턴 조합의 시기 동안에만 북한은 남한과 미국의 포용-포용의 대북 정책 조합, 즉 온건-온건 대북 정책 조합을 만날 수 있었다. 과거 남한과 미국은 강경과 포용을 동시에 펴거나 엇갈린 정책 조합을 형성해

왔다. 2000년 김대중-김정일 남북 정상회담과 김정일-올브라이트 Madeline Albright(당시 미국무장관) 회담은 양자의 포용 정책 조합이 빚어낸 대북 문제 해결의 절호의 기회였다. 그러나 북·미는 김정일-올브라이트 회담에서 작은 문제로 회담을 결렬시키고 말았다. 북한으로서는 큰 손실이었다. 당시 회담에서 북한이 대폭적인 — 사실은 당시 시점에서는 그리 대폭적이지도 않았다 — 양보를 통해 평양과 워싱턴에 성조기와 인공기를 게양하는 관계 정상화의 단초를 마련했다면 오늘의 위기는 불필요한 여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앞으로 2000년은 한반도 평화 도정에서 가장 안타까운 한 해로 기록 될 것임에 틀림없다.

결국 북·미 관계, 북·미 평화협정이 아니라, 남북관계, 남북 평화협정이 바로 해결의 단초요 요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을 국제 체제가 보장해주는 문제는 당연한 전제가 된다. 남북 평화협정을 통해 남북관계는 '평화 체제'로 나아가며, 동시에 한·미 관계는 작전지휘권 이양을 통해 '대등화'로, 북·미 관계는 국교 수립을 통해 '정상화'로 가야 한다는 점이다. 남북 평화협정을 통해 북핵 완전 포기 and 대북 경제 협력의 대교환, 이른바 '노무현 플랜'을 우리는 가동할 수 있을 것이다. 휴전협정을 대체한 남북 평화협정이 맺어질 경우 비로소 북·미 관계는 '정치적' 수준에서의 국교 정상화, '군사적' 수준에서의 체제 보장, '경제적' 측면에서의 경제 봉쇄 해제를 이뤄야 할 것이다. 또 남북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남한은 북한이 갖고 있는 불신, 즉 남한은 미국의 군사종속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군사·평화 문제는 미국 과만 해결하겠다는 불신을 한·미 관계의 '대등화'를 통해 해소해야 한다. 즉 현시점에서는 '남북' 평화협정, '한·미' 대등화, '북·미' 정상화, 3변 관계의 동시 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문제의 궁극적 해결이 가장 바람직하면서도 실현 가능한 경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 역시 더 이상 한·미 '위계' 관계와 북·미 '적대' 관계의 지속을 통해 이 문제를 풀어가려는 대한 반도 전략을 추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식의 사회성과 생명과 평화의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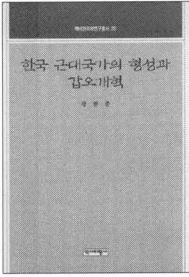
사회과학도인 필자는 지식의 사회성을 자주 유념한다. 곧 지식의 사회적 실천을 말한다. 기능적이며 도구적인 지식을 지양, 권력 현실을 합리화하는 역할을 넘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가운데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문제는 사회과학의 최소한의 존재 이유가 아닌가 하는 점이다. 사회적 실현 가능성을 포함하지 않는, 이념적·도덕적 당위성만을 강조하는 지식 역시 순수과학의 영역이 아닌 사회과학에서는 수용되기 어렵다. 기능적 도구성과 도덕적 당위성 양자의 한계를 동시에 지양하는, 그 사이 어디에선가 사회적 실현 가능성의 공간을 열어보려는 실천철학의 입장은, 또한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지식을 통해 역사와 현실에 개입하고 헌신하는 지식인의 역할은 가장 이상적인 사회실천적인 의미를 내포한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한국전쟁을 연구하며 전쟁의 장면 장면에서 반생명성, 반평화성, 반인간성의 극단을 수없이 목도한 필자에게 2002년 10월 4일 이후 우리 사회의 위기는 한국전쟁 이래로, 최소한 그에 버금가는 우리 사회 최대의 위기로 다가왔다. 그것은 한국전쟁에 대한 연구 자체가, 한국전쟁이 남긴 많은 현실적 문제의 해소에 기여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윤리적·사회적 토대를 갖지 못한다는 의식의, 현실의 엄중한 위기가 요구한 증폭 심화로 나타났다. 궁극적 문제의 해결에 실패해 파국으로 치닫는다면 오늘날 한반도에서의 전쟁의 피해와 귀결은 한국전쟁에 결코 비할 바 아니라는 점은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오늘의 평화 건설 의제는 지난 시기의 민주화 의제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것임에 틀림없다.

전쟁이 발발한다면 우리의 일상과 평화는 물론 사랑도, 약속도, 재산도, 꿈도, 희망도 그리고 끝내는 생명 자체도 사실은 종말일 수 있지 않은가. 우리는 그토록 참혹한 전쟁을 겪었음에도 종전 이후 지난 50년 동안 적극적인 평화를 안출하기 위해 무엇을 했던 말인가? 평화의 문제는 삶의 질의 문제 이면서 무엇보다도 삶의 질 이전의 근본적인 존재의 문제, 즉 삶과 죽음 자

체를 평가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평양에 들어가기 전 두 달 동안 2주간격으로 중국·일본·미국을 방문,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이외의 주요 관련 국가들의 견해를 청취한 연유도 심장부 평양에서 이 문제를 해소하는데 조금이나 기여해보려는 사회적 실천의지 때문이었다. 민족의 핵화核化와 전쟁을 막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주체인 남한(시민사회)에게도 분명히 귀착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분단 한국에서 생명과 평화를 위한 노력은 그 자체 지식의 사회적 실천 의지와 내용을 담는 것이다. 그 점에서 오늘의 평화 전략은 과거와 오늘의 어떤 국가 발전 전략보다도 화급한 절체절명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올해 비극적이었던 한국전쟁 종전 50주년을 맞는다. 반세기만에 다시 도래한 절체절명의 전쟁 위기 앞에서 거꾸로 우리는 올해가 한반도 평화의 원년이 되기를 절실히 소망해 본다. ■

박명필 mtpark@yonsei.ac.kr |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고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하버드대학교 하버드-엔칭연구소 협동연구학자 역임. 저서로는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1,2(나남 1996), 『한국 1950: 전쟁과 평화』(나남 2002)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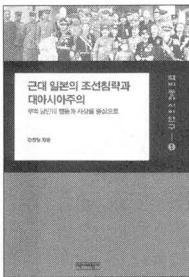


한국 근대국가의 형성과 갑오개혁

한국 근대의 출발로서 갑오개혁이 갖는 중요성에 주목한 이 책은 한국 근대국가의 형성과정을 3단계로 정식화하고 그 단계설정의 핵심에 갑오개혁을 두고 있다. 즉 갑오개혁은 근대화정책을 만드는 '정책화 단계'에서 국가의 제도로 정착되는 '제도화 단계'까지는 이르렀으나, 최종적으로 근대법전을 만드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여 실패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법제화 과정에서 국민적 여론을 수용하지 않은 위로부터의 개혁방안이 갖는 근본적인 특징과 한계이다.

왕현중/482쪽/2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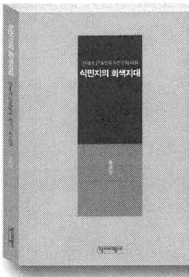
▶2002년 문화관광부 우수학술도서

근대 일본의 조선침략과 대아시아주의

우익낭인의 행동과 사상을 중심으로

메이지유신을 거쳐 근대국가를 이룩한 일본이 대륙침략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조선내정 간섭과 청일·러일전쟁 등을 거쳐 마침내 '한일합방'을 강행하게 되는 일련의 역사적 과정을 일본 '낭인'들의 활동과 대아시아주의를 중심으로 살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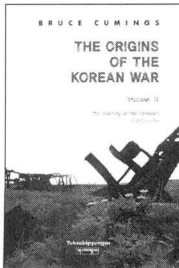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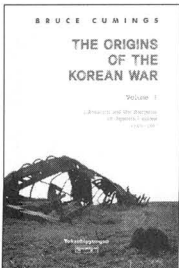
강창일/421쪽/20,000원



한국사학계에 던지는 진지한 도전과 비판 식민지의 회색시대

"내가 결별하고자 하고, 타격을 가하고자 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야 할 '구세계', 그리고 거기서 사용하였던 무기는 내게 가장 익숙한 세계와 무기가 아니었던가? 지금 나는 그 무기를 버리려 하는가? 아니면 새롭게 버리려 하는가? 그도 아니면 그 양날의 무기를 거꾸로 향하게 하려 하는가?"

윤해동/320쪽/15,000원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1-2

브루스 커밍스 교수의 역저
「한국전쟁의 기원」 영어판과 번역서가
역사비평사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영어판 5월 출시,
번역서 2004년 발간 예정!



시대의 불꽃

- ① 전태일
- ② 최종길
- ③ 김진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수많은 민주주의 전령들의 삶과 투쟁과 죽음을
온전히 복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많은 시간 동안 지속될 「시대의 불꽃」 발간 사업은
기억 속에서 다시 살아난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경험과 자산,

그리고 열사들의 삶이 미래를 여는 힘으로

되살아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